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 17~20대 총선 분석

박상운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왜 어떤 현직의원은 재공천을 받지 못하는가?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기존연구들은 한 시점의 총선만을 분석하였고, 주로 정당단합표결(party unity voting) 점수로 정당 충성도를 측정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네 차례의 총선들을 분석하고,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서 대정부질문 횟수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20대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새누리당(한나라당)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17대 총선에서만 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먼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18대와 20대 총선에서만 당의 이념 평균에 가까운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은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일부 총선에서 재공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주제어 | 재공천, 대정부질문, 총선, 정당 충성도

I. 서론

현직의원은 현직자 이점(incumbent advantage)을 가져서 도전자(challenger)에 비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현직의원은 재공천을 받지 못하는가? 도전자들과는 달리, 현직의원은 현직에서 가지는 권한과 자원을 토대로 선거에서 현직자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현직자 이점은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비해 재당선 가능성 또는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직 프리미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현직자 이점은 입법권/행정부 견제 및 감시권/예산 심의권과 같은 권한들, 정치후원금을 통한 선거운동 자원 확보, 의정 경험 등에서 나온다(박상운 · 이호준 2015; Carson et al 2007; Mayhew 1974).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직의원의 재당선률이 80~90%에 이르면서 현직자 이점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현직자 이점에 관한 연구들은 본선에서 현직의원의 재당선률 또는 득표율이 높은지와 어떤 요인들이 현직자 이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Carson et al. 2007; Cox and Katz 1996; Krasno and Green 1988; Levitt and Wolfram 1997). 그리고 경선(primary election)에서도 현직자 이점이 작용하여 현직의원의 재공천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다(Hogan 2003; Snyder and Ting 2011).

반면에, 한국은 지난 세 차례의 총선 공천에서 현직의원의 약 30~40%가 재공천을 받지 못했다.¹⁾ 이처럼 한국은 총선 때마다 현역의원의 교체율이 높은 편이지만,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빈약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정당공천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당내 계파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내 계파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현직의원의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한국에서도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에

1) 19~21대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현직의원 교체율을 보면, 19대 총선은 새누리당 41.7%, 민주통합당 38%,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38.9%, 더불어민주당 31.5%,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 43.5%, 더불어민주당 28.7%를 기록했다(박상운 2020).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정당지도부(당대표)가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의 당론을 잘 따르는 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한 연구는 최혜령(2013)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 역시 19대 총선에 출마한 18대 현직의원만을 분석하다 보니, 지난 총선들에서도 현직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지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는 W-NOMINATE로 측정된 현직의원의 이념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이 역시 18대 현직의원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 정당 충성도는 주로 법안표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정당단합표결(*party unity voting*) 점수로 측정해왔다(Cox and McCubbins 1993; 문우진 2011; 최혜령 2013). 그러나 의원이 법안표결 이외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척도를 통해 당론을 잘 따르는 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지도부(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자로 나설 의원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7~20대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법안표결 자료를 통해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측정한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척도로서 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 가능성을 높이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새누리당(한나라당)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17대 총선에서만 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먼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18대와 20대 총선에서만 당의 이념 평균에 가까운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은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일부 총선에서 재공천 가능성을 높이

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2장은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3장은 분석대상, 변수측정, 분석모델, 4장은 분석결과, 5장은 본 연구의 결론, 의의,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II. 현직의원의 재공천에 관한 논의

1.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에 관한 해외의 기존연구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정치 경력(political career), 당적변경, 지역구의 경제적 상황이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의원은 유권자의 대리인(delegate)으로서 의회에서 입법, 행정 부 견제 및 감시, 예·결산 심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도 법안 발의, 의회 연설, 법안표결은 의원이 재선을 위해 업적을 과시(credit claiming)하고,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taking position)하는 대표적인 수단들이다(Mayhew 1974).

먼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의원이 법안을 많이 발의할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Yildirim et al 2019). 왜냐하면 법안발의수가 많은 의원은 업적 과시와 정치후원금 모금에 유리하여 재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발의수는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입법 생산성 지표로서, 유권자에게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들 중에 하나이다(Mayhew 1974). 만약 유권자가 의원의 입법실적을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일수록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Frantzich 1979). 그리고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유권자 또는 이익집단들의 정책적 선호를 반영하여 법안을 만들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확보한다면, 선거운동자원으로 활용하여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Hall and Wayman 1990; Powell 2013; Schroedel 1986; Stratmann 1991). 따라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한 의원은 재선 가능성이 높아서 재공천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이 의회 연설(legislative speech)에서 소속 정당이 중요시하는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할수록, 그리고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법안투표를 할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있다(Baumann et al. 2017; Yildirim et al. 2017). 왜냐하면 정당지도부는 정당 정책을 실현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론을 잘 따르는 의원이 다음 선거에도 재출마해서 재당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지도부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하거나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의원이 의회 연설이나 법안표결에서 당론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다면, 정당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의회 연설을 하거나, 법안투표를 한 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의원이 의회의장 및 부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상임위원장, 장관직 등을 맡을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Marino et al 2017). 왜냐하면 의원이 의회직, 당직, 장관직을 맡게 되면, 의회, 정당, 정부 부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인지도(recognition)가 올라가서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장 및 부의장, 원내대표는 의회의 의사 일정을 조율하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및 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그리고 당대표, 사무총장, 대변인은 소속 의원과 당원을 대표하여 정당 정책을 제시하거나 홍보한다. 또한, 장관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집권당의 일원이자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집행 및 지원한다. 골덴과 피치(Golden and Picci 2015)는 장관직을 역임한 의원

일수록,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재공천률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의원들은 평판(reputation)이 높아져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고,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의원이 기존의 소속 정당을 탈당해서 다른 정당에 입당한 경우,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Marino et al. 2017). 의원이 새로 입당한 정당의 지도부가 당적을 변경한 의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재공천을 한다는 것이다. 의원은 재선이 최우선의 목표이다(Mayhew 1974). 그래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재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재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한다(Klein 2016). 만약 의원이 당적변경을 한다면, 의원이 새로 입당한 정당의 지도부는 정당의 총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새로 입당한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

마지막으로, 실업률 등과 같이 지역구의 경제 지표가 나쁘면, 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다(Baumann et al. 2017). 왜냐하면 지역구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유권자들은 현직의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를 얼마나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따라 재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현직의원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킨다면, 유권자들은 현직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현직의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도전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역구의 경제 상황이 나쁘면,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보다는 재당선 요인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박명호·김민선 2008; 윤종빈 2006; 한정택 2007). 왜냐하면 한국 정당들의 공천과정은 총선 때마다 밀실 또는 계파 공천 논란이 지속되면서,

2) 마리노와 그의 동료들(Marino et al. 2017)은 ‘당적변경을 한 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가설검정 결과는 당적변경을 한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계파가 논의의 중심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당들의 총선 공천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당권을 장악한 지도부 계파가 경쟁 계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천을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길정아 2011; 김영태 2004; 박경미 2008; 유용화 2015; 윤종빈 2012). 이로 인해 정당지도부가 당내 계파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직의원의 재공천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들이 현직의원의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물론, 당내 계파 이외에 현직의원의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소호영(2015)은 가결법안수, 활동상 임위원회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영진(2016)은 현직의원의 의정활동(대표발의법안수, 가결법안수)과 당직(대변인, 당협위원장 등)이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임기 후반기에 지역구 활동(지역구 행사 방문 횟수)이 많은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정당지도부(당대표)가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잘 따르는 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지 않았다. 특히, 현직의원의 정당 충성도(*party loyalty*)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최혜령(2013)이 유일하다. 그는 현직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정당단합표결 점수와 W-NOMINATE 점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18대 현직의원만을 분석하다 보니, 다른 총선들에서도 현직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 정당 소속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을 다른 정당 소속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정당단합표결 점수를 산출해왔다(Cox and McCubbins 1993; 문우진 2011; 최혜령 2013). 이에 본 연구는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서 대정부질문 횟수를 제시한다.

2. 현직의원의 이념, 대정부질문과 재공천 가능성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협동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의석 극대화를 추구한다(Downs 1957). 정당이 의석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정당 정책을 실현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에 정당지도부는 의원의 정당 충성도에 따라 보상(reward) 또는 처벌(punish)할지를 결정하여 정당 정책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유인한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론들 중에 정당 이론은 정당지도부가 당론을 잘 따르는 의원을 선호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당론을 잘 따른 것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본다. 반면에, 당론을 잘 따르지 않은 의원은 비선호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본다(Cox and McCubbins 1993). 이는 정당지도부가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활용하여 의원이 당론을 따르게 유인함으로써, 정당 정책의 실현을 통한 의석 극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과 처벌의 기제는 공천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지도부는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의원을 재공천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의원은 재공천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정당지도부는 정당과의 정치적 이념 거리가 가까운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동조하는 의원은 정당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이념은 “사회의 가치 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Entman 1983), 보수/중도/진보 등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를 대표하는 대리인(delegate), 소속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정당인(partisan),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수탁자(trustee)의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Dalton 2014).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직의원들이 대리인이나 수탁자보다 정당인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정당지도부(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단합표결 점수를 통해 정당 충성도를 측정된 기존연구들은 국

회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약 90%대 이상으로, 의회중심제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문우진 2011; 전진영 2010).

그렇지만 한편으로 개별 의원들 간의 정당 충성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원별로 지역구 상황에 비중을 두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은 때로 지역구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시해서 당론을 이탈하여 법안 표결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해원과 히스(Jun and Hix 2010)는 농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원 다수와 반대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농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의원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 확보 능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지역구의 의원은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보다 유권자의 요구에 더 반응해서 법안표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원이 정당인보다는 대리인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둘 경우, 당론을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당내 응집성(intra-cohesiveness)이 약화될 수 있다.

당내 응집성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또는 신념에 따라 법안표결, 정책 선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전 2008; Morgenstern 2004). 이에 정당지도부는 당내 응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내 응집성의 정도가 정당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당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arey 2009). 즉, 당내 응집성에 따라 정당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정당이 찬성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당지도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에 동조하는 의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지도부(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원이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동조하는 의원이 재공천을 받아 재당선된다면, 당내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당이 찬성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지도부는 당내 응집성을 유지하여 정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이념에 가까운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 소속 정당의 이념에 가까운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당 충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로서, 의정활동들 중에 하나인 대정부질문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지도부(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 중에 누구를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당지도부(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자로 선정한 의원을 몇 번째로 질문하게 할지 질문 순서를 정해주며, 어떤 내용을 질문하게 할지를 사전에 통제하기도 한다. 특히, 대정부질문이 여·야당 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지도부의 대정부질문자 선정 권한은 정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정부질문은 현직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대정부질문의 본래 취지는 현직의원이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상대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 및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당 지도부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보다는 정쟁(政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김병준 1989; 박찬욱 1995).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이외에도, 여·야당 간에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asch 2011; Rozenberg and Martin 2011). 이로 인해 정당지도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당 정책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하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예를 들면, 살몬드(Salmond 2014)는 22개 유럽국가들의 의회 대정부질문이 유권자

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정부질문이 유권자의 당파성(partisan)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베일러(Bailer 2011)는 스위스 의회의 대정부질문을 분석하였는데, 정당들이 소속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수비수’를, 야당은 여당을 잘 공격할 수 있는 ‘저격수’를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우려고 한다. 이는 정당지도부(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 중에 당론을 잘 따르는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³⁾ 만약 여당지도부가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운 의원이 정부 정책 또는 당론을 잘 옹호한다면, 여당지도부는 그 의원에게 차후에도 대정부질문자로 나설 기회를 더 줄 것이다. 반면에, 여당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또는 당론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이거나, 당론과 관련 없는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만 치중한다면, 여당지도부는 그 의원을 차후에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의원에게 차후에도 대정부질문자로 나설 기회를 더 줄 것이다. 반면에, 야당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면, 야당지도부는 그 의원에게 차후에 대정부질문자로 나설 기회를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직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을수록,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정부질문자로 많이 나선 의원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물론, 정당지도부(원내대표)가 어떤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울지를 결정할 때는 정당 충성도 이외에도 의원의 전문성, 선수, 대정부질문 당시의 이슈, 다른 의원들과의 질문 기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당론에 맞게 대정부질문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고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원이 전문성이 있거나 선수가 높더라도, 당론을 잘 따르지 않는 의원이라면 정당지도부가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2: 대정부질문자로 많이 나선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7~20대 총선 공천을 신청한 16~19대 현직 국회의원이 다. 16대 현직 국회의원부터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16대 국회부터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법안표결 자료를 가지고 W-NOMINATE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두 정당이 이합집산을 통해 통폐합되거나 당명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집권을 두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정당들을 제외한 다른 군소 정당들은 의원수가 적어서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16~19대 국회의원은 총 1,293명이다. 그런데 의원이 사망, 의원직 상실(형 확정,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사직, 비례대표 의원 탈당으로 인한 퇴직,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 불출마 선언을 한 경우(총 150명)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사망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현직자로 있는 것이 아니며,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현직에 있으나 재공천 받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직의원이 총선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인 경우(총 8명)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⁴⁾ 왜냐하면 이러한 의원들은 공천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들이 통폐합되기

4) 의원이 사망, 의원직 상실,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총 150명), 총선 공천 심사 이전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남은 경우(총 8명)는 그 명단을 정리하여 뒷면의 <표 5>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나 당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당들이 통폐합되거나 당명을 변경한 것은 개별 의원의 결정이 아니라, 정당지도부들 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의원이 총선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또는 분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한 경우(총 90명)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⁵⁾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대정부질문 횟수가 이전 소속 정당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신당이나 다른 정당의 지도부가 의원이 이전 정당에서 했던 대정부질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진보신당은 현직의원들이 이전의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구성한 신당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1,045명의 현직의원들이다. 16~19대 국회의원 명단은 16~19대 국회의사를 통해 수집하였다(국회사무처 2011; 2012; 2014; 2018).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현직의원이 재공천을 받았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현직의원이 소속 정당에 총선 공천을 신청해서 재공천을 받았다면 1, 받지 못했다면 0으로 코딩한다. 그리고 현직의원이 소속 정당의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후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한 경우도 0으로 코딩한다. 왜냐하면 현직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재출마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한 것은 소속 정당의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17~20대 총선 공천 신청자 명단은 새누리당(現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와 각종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서 수집하였고, 17~20대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5) 의원이 총선 공천 심사 이전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신당 창당(또는 분당)을 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한 경우(총 90명)는 그 명단을 정리하여 뒷면의 <표 6>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출마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보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16~19대 현직 국회의원의 법안표결 자료로 산출한 W-NOMINATE와 대정부질문자로 나신 횟수이다.

먼저, 의원의 이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W-NOMINATE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실시한 법안표결 자료를 통해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이다(Poole et al. 2011).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의 이념을 측정하는 방식은 질문 항목이나 질문 시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모든 의원들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서 결측값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W-NOMINATE는 의원이 실제로 표결한 수천 건의 법안들을 가지고 의원의 이념을 추정해서 정확성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W-NOMINATE를 사용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약 8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이내영·이호준 2015; 장덕진 외 2012; Poole 2005). 이에 본 연구는 W-NOMINATE를 의원의 이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W-NOMINATE는 의원의 법안표결 자료를 통해 1, 2차원 등과 같은 다차원 공간에서 의원들이 가지는 최적점(ideal point), 즉 의원의 이념 성향을 추정한 것이다(이내영·이호준 2015). W-NOMINATE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6~19대 국회 법안표결 자료를 가지고, 풀과 그의 동료들(Poole et al. 2011), 로(Lo 2012)가 제시한 R 코드들을 활용하여 각각 16~19대 국회의원의 W-NOMINATE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W-NOMINATE는 1차원과 2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확인한 결과, W-NOMINATE를 산출한 기존연구들과 동일하게 2차원보다 1차원의 W-NOMINATE가 더 설명력을 가진다(이내영·이호준 2015; 장덕진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 의원의 이념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1차원의 W-NOMINATE 값을 활용한다.⁶⁾

6) 그리고 법안표결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를 의미하는 분류정확도(correct classification)를 보면, 16대 국회는 1차원 88.67%, 2차원 90.21%, 17대 국회는 1차원

W-NOMINATE는 -1 ~ 1의 값을 가지는데, -1은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1은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가설1이 “소속 정당의 이념에 가까운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인 점을 고려하여, 현직의원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재산출하였다. 먼저, 16~19대 국회에서 정당별로 이념 평균을 산출한 후에, 정당의 이념 평균에서 개별 의원들의 이념 점수를 뺀다. 그 다음에, 음(-)의 값이 나오면 절대값으로 변환하여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로 현직의원의 이념 점수를 산출한다. 즉, 현직의원의 이념 점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소속 정당과의 이념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7대 현직의원의 W-NOMINATE를 산출한 결과, 한나라당 이념 평균이 0.37964이고,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의 이념이 0.10443이면, $0.37964 - 0.10443 = 0.27521$ 로 계산된다. 반면에, 통합민주당 이념 평균은 -0.52615 이고,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념이 -0.57395 이면, $-0.57395 - (-0.52615) = -0.04780$ 이 되어 절대값($|-0.04780| = 0.04780$)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보다 0에 더 가까운 값을 가져서,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6~18대 국회 법안표결 자료는 이내영·문우진·신재혁(2013)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19대 국회의원의 법안표결은 이호준(2016)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서, 16~19대 현직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를 측정하였다. 16~19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는 제16~19대 국회사(국회사무처 2011; 2012; 2014; 2018)와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91.85%, 2차원 92.63%, 18대 국회는 1차원 92.65%, 2차원 93.15%, 19대 국회는 1차원 92.53%, 2차원 92.86%이다. 이는 1차원과 2차원의 W-NOMINATE가 의원들의 최적점을 잘 추정했음을 보여준다(이내영·이호준 2015).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은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 선수(당선 횟수), 대표발의법안수, 지역구 의원 여부, 성별, 소속 정당, 총선 시기이다.

먼저, 정당지도부의 일원으로 원내·외 당직을 역임한 현직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의원이 원내·외 당직을 맡게 되면,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언론 노출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 결과, 정당지도부의 일원인 현직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당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아서 재공천을 받을 것이다.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은 의원이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을 맡은 횟수로 측정한다. 현직의원의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과 관련된 정보는 네이버 인물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둘째, 선수가 높은 현직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선 의원은 초선의원보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쌓아온 여러 업적들을 과시할 수 있고,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재공천을 받을 것이다. 선수는 현직의원이 당선된 횟수로 측정한다.

셋째, 앞서 기존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안을 많이 발의한 현직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업적을 과시하여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은 다양한 이익집단들로부터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후원받아서 선거운동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의원은 재선 가능성이 높아져 재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안 발의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수로 측정하였는데, 예산안, 결의안, 철회 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넷째,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에 비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도 현재의 지역구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비

례대표로 다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재출마를 하려면, 지역구 의원과 공천 경쟁을 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활동, 업적 과시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공천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구 의원이면 1, 비례대표 의원이면 0으로 코딩한다.

다섯째, 인구적 요인으로 성별을 통제변수에 포함시킨다. 현직의원이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으로 코딩한다.

여섯째, 소속 정당에 따라 현직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각 정당들마다 공천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주요 공천 기준으로 현직 지역구 의원의 25% 컷오프(cut off)와 전체 지역구의 20% 전략공천을 제시한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3단계 자격심사 도입과 전체 지역구의 30% 전략공천을 제시한 바 있다(박상운 2012). 이에 따라 현직의원이 소속된 각 정당들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코딩하였다. 16~19대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정당들의 신당 창당과 소멸, 합당, 당명 변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변수를 설정하였다. 가변수로 만든 정당들은 새누리당(한나라당),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자유민주연합),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정의당이며, 여기서 기준집단은 기타 정당들(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창조한국당)이다. 그리고 앞서 ‘분석대상’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진보신당은 현직의원들이 이전의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구성한 신당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가변수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시기마다 각 정당들의 공천 규정들이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선이 치러진 각각의 시기도 가변수로 코딩하였다. 가변수로 만든 총선 시기는 18대 총선(2008년), 19대 총선(2012년), 20대 총선(2016년)이고, 여기서 기준집단은 17대 총선(2004년)이다. 아래의 <표 1>은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구분		Obs	Mean	SD	Min	Max
종속변수	재공천(낙천=0, 공천=1)	1,045	0.620	0.486	0	1
독립변수	이념(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1,028	0.156	0.151	0	0.854
	대정부질문 횟수	1,045	2.016	1.689	0	10
통계변수	정당지도부(원내·외 당직) 역임	1,045	0.372	0.630	0	3
	선수	1,045	1.836	1.148	0	9
	대표발의법안수	1,045	27.629	33.023	0	351
	지역구 의원	1,045	0.803	0.398	0	1
	성별(여성=0, 남성=1)	1,045	0.866	0.341	0	1

3. 분석모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현직의원의 재공천 여부가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분석모델은 16~19대 현직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델과 총선이 치러지는 시기마다 정당별로 구분한 모델로 설정한다. 그런데, 16~19대 현직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델의 경우, W-NOMINATE로 산출한 현직의원의 이념 변수는 불가피하게 제외한다. 왜냐하면 W-NOMINATE는 여러 시점의 회기들을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회기 내에서만 횡단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내영·이호준 2015). 따라서 W-NOMINATE로 산출된 현직의원의 이념 변수는 총선 시기마다 정당별로 구분한 모델에만 투입해서 분석한다.

16~19대 현직의원 전체 분석모델

$$\log[\Pr(\text{공천}=1 \mid \text{낙천}=0)] = \beta_0 + \beta_1 \text{대정부질문 횟수} + \beta_2 \text{정당지도부 역임} \\ + \beta_3 \text{선수} + \beta_4 \text{대표발의법안건수} + \beta_5 \text{지역구 의원} + \beta_6 \text{남성} + \beta_7 \text{소속 정당} + \\ \beta_8 \text{총선 시기} + \varepsilon$$

총선 시기에 따른 정당별 분석모델

$$\log[\Pr(\text{공천}=1 \mid \text{낙천}=0)] = \beta_0 + \beta_1 \text{이념(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 \beta_2 \\ \text{대정부질문 횟수} + \beta_3 \text{정당지도부 역임} + \beta_4 \text{선수} + \beta_5 \text{대표발의법안건수} + \beta_6 \\ \text{지역구 의원} + \beta_7 \text{남성} + \varepsilon$$

IV. 분석결과

먼저, 아래의 <표 2>는 앞서 ‘분석대상’ 절에서 언급한 총 1,045명의 현직의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W-NOMINATE로 산출한 현직의원의 이념 변수를 불가피하게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W-NOMINATE의 경우, 한 회기 내에서 횡단 분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내영 · 이호준 2015). 따라서 총선이 치러진 시기마다 정당별로 구분해서 분석할 때, 현직의원의 이념 변수를 포함하여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표 2〉 16~19대 현직의원의 재공천 요인(17~20대 총선) 분석 결과

구분		Coef.	Odds Ratio
	대정부질문 횟수	0.194*** (0.050)	1.214 (0.061)
	정당지도부 역임	0.303** (0.119)	1.354 (0.161)
	선수	-0.104 (0.069)	0.901 (0.062)
	대표발의법안수	0.002 (0.002)	1.002 (0.002)
	지역구 의원	1.700*** (0.207)	5.473 (1.131)
	남성	-0.167 (0.236)	0.847 (0.200)
소속 정당	새누리당(한나라당)	1.287 (1.341)	3.622 (4.859)
	더불어민주당 (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1.558 (1.345)	4.750 (6.389)
	자유선진당(자유민주연합)	2.029 (1.442)	7.607 (10.967)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1.911 (1.508)	6.759 (10.195)
	정의당	1.370 (1.655)	3.936 (6.515)
총선	18대(2008년)	0.016 (0.215)	1.016 (0.218)
	19대(2012년)	-0.521** (0.216)	0.594 (0.128)
	20대(2016년)	-0.192 (0.232)	0.826 (0.192)
	상수	-2.282* (1.340)	0.102 (0.137)
N		1045	
Log pseudolikelihood		-626.366	
Pseudo R ²		0.097	

주: ()는 개별 의원 수준에서 군집된 로버스트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임; * p<0.1, ** p<0.05, *** p<0.01

분석결과,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약 1.2배 증가한다. 정당지도부(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자를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은 당론을 잘 따라서 지도부의 신뢰를 얻은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대정부질문을 많이 한 의원은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현직의원이 원내·외 당직을 역임했을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약 1.3배 증가한다. 정당지도부에 소속되어 활동한 의원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당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경륜을 갖춘 지도자임을 각인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당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의원은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일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약 5.4배 증가한다. 반면에, 의원의 선수⁷⁾, 대표발의법안수, 성별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선이 치러진 시기마다 정당별로 구분해서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총선 시기마다 정당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W-NOMINATE로 산출한 이념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7) 다선 의원이 원내·외 당직을 역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수와 정당지도부 역임 간의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1968($p < 0.01$)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기존연구들도 두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어 보인다(김기동 외 2018; 소호영 2015).

〈표 3〉 16~19대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의 재공천 요인(17~20대 총선) 분석 결과

구분	17대 총선(2004년) 한나라당<야당>		18대 총선(2008년) 한나라당<여당>		19대 총선(2012년) 새누리당<여당>		20대 총선(2016년) 새누리당<여당>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이념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2.563* (1.563)	12.971 (20.270)	1.279 (1.344)	3.594 (4.829)	0.506 (1.128)	1.658 (1.871)	0.318 (2.000)	1.375 (2.750)
대정부질문 횟수	0.260 (0.185)	1.297 (0.239)	0.100 (0.160)	1.105 (0.176)	0.097 (0.097)	1.102 (0.106)	0.008 (0.109)	1.008 (0.110)
정당지도부 역임	1.039** (0.505)	2.826 (1.426)	0.800* (0.410)	2.226 (0.914)	0.603* (0.333)	1.827 (0.608)	0.053 (0.350)	1.054 (0.369)
선수	-0.654*** (0.206)	0.520 (0.107)	-0.631*** (0.244)	0.532 (0.130)	-0.074 (0.181)	0.929 (0.168)	-0.146 (0.174)	0.864 (0.150)
대표발의 법안수	-0.016 (0.030)	0.984 (0.030)	-0.009 (0.010)	0.991 (0.010)	-0.002 (0.007)	0.998 (0.007)	0.004 (0.006)	1.004 (0.006)
지역구 의원	1.255** (0.638)	3.508 (2.237)	1.175 (0.769)	3.240 (2.492)	1.196** (0.527)	3.305 (1.743)	2.144*** (0.610)	8.536 (5.204)
남성	0.821 (1.066)	2.272 (2.423)	-0.807 (0.831)	0.446 (0.371)	0.241 (0.522)	1.272 (0.663)	0.799 (0.659)	2.223 (1.465)
상수	-1.068 (1.132)	0.344 (0.389)	0.976 (0.870)	2.653 (2.308)	-1.306* (0.677)	0.271 (0.183)	-1.990*** (0.754)	0.137 (0.103)
N	131		123		172		157	
Log likelihood	-70.582		-73.310		-112.143		-91.787	
Pseudo R ²	0.194		0.086		0.054		0.128	

주: ()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p<0.1, ** p<0.05, *** p<0.01

분석결과,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이념이 정당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나라당 의원의 이념이 한 단위 증가할 때, 17대 총선에서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약 12배 증가한

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 정당의 이념에 가까운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된 것이다. 그리고 18~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의 이념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새누리당(한나라당) 지도부가 현직의원의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때, 현직의원의 이념을 덜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20대 총선에서 대정부질문 횟수의 회귀계수들이 모두 양(+)¹⁾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20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나타났다. 즉, 17,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이 원내·외 당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을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각각 약 2.8배(17대 총선), 약 2.2배(18대 총선), 약 1.8배(19대 총선) 증가한다. 이는 새누리당(한나라당)이 현직의원의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때, 의원이 원내·외 당직을 역임하여 당에 공헌했는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7,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각각 약 0.5배 감소한다. 이는 17대 총선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컸던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다선 의원들을 낙천시킴으로써, 유권자에게 당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내에서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간의 당내 계파 갈등이 컸던 상황에서, 이명박계가 박근혜계의 다선 의원들을 낙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한나라당)은 18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각각 약 3.5배(17대 총선), 약 3.3배(19대 총선), 약 8.5배(20대 총선) 증가한다.

반면에,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수와 성별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가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이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의원의 책임성

재고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의원들의 법안 베끼기,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 문제를 고려하면, 의원이 법안을 무조건 많이 발의한다고 해서 책임성을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의원의 법안 발의는 유권자의 다양한 신호를 반영하여 정책으로 만드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정당지도부가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 4>는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16~19대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의원의 재공천 요인(17~20대 총선) 분석 결과

구분	17대 총선(2004년) 새천년민주당<여당>		18대 총선(2008년) 통합민주당<야당>		19대 총선(2012년) 민주통합당<야당>		20대 총선(2016년) 더불어민주당<야당>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이념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1.563 (2.973)	0.210 (0.623)	-5.947* (3.075)	0.003 (0.008)	0.240 (1.563)	1.272 (1.988)	-2.100* (1.312)	0.123 (0.161)
대정부질문 횟수	0.536* (0.309)	1.709 (0.527)	0.101 (0.173)	1.106 (0.192)	0.462** (0.183)	1.587 (0.290)	0.461*** (0.172)	1.586 (0.273)
정당지도부 역임	0.935 (0.685)	2.547 (1.744)	0.507 (0.418)	1.660 (0.694)	1.047** (0.495)	2.849 (1.409)	0.085 (0.311)	1.089 (0.339)
선수	1.567*** (0.536)	4.792 (2.567)	0.071 (0.280)	1.074 (0.301)	-0.102 (0.271)	0.903 (0.245)	0.141 (0.247)	1.152 (0.284)
대표발의 법안수	0.198 (0.127)	1.219 (0.155)	0.069** (0.029)	1.071 (0.031)	0.015 (0.009)	1.015 (0.010)	-0.003 (0.005)	0.997 (0.005)
지역구 의원	0.333 (0.894)	1.395 (1.247)	3.443*** (1.102)	31.272 (34.448)	2.925*** (1.022)	18.639 (19.042)	1.280* (0.664)	3.595 (2.389)
남성	-2.056 (1.780)	0.128 (0.228)	-1.691 (1.145)	0.184 (0.211)	0.877 (0.957)	2.404 (2.299)	-0.722 (0.625)	0.486 (0.303)
상수	-2.420 (1.829)	0.089 (0.163)	-1.461 (1.052)	0.232 (0.244)	-4.421*** (1.454)	0.012 (0.017)	-0.201 (0.936)	0.818 (0.766)
N	58		140		88		110	
Log likelihood	-22.843		-64.730		-41.318		-62.743	
Pseudo R ²	0.406		0.263		0.276		0.106	

주: ()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 p<0.1, ** p<0.05, *** p<0.01; 16대 국회에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둘로 쪼개졌다. 앞서 ‘분석대상’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현직의원이 총선 공천 심사 시작 이전의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또는 분당)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18대와 20대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이념이 정당의 이념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재공천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 의원의 이념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각각 약 0.002배(18대 총선), 약 0.12배(20대 총선)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현직의원의 이념이 정당의 이념 평균에 가까울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이 당이 지향하는 이념에 동조하는 의원을 재공천함으로써, 당내 응집성을 유지하여 보수를 지향하는 여당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에,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에 치러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각각 약 1.7배(17대 총선), 약 1.5배(19대 총선), 약 1.5배(20대 총선)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한나라당)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한나라당)보다 현직의원의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때,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7대 총선 당시에는 여당(새천년민주당), 19대와 20대 총선 당시에는 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이었음을 고려하면,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19대 총선에서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내·외 당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을 때, 19대 총선에서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약 2.8배 증가한다. 17, 18, 20대 총선에서는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의 회귀계수들이 양(+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7~19대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이 재공천 가능성을 높인다는 새누리당(한나라당)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한나라당)보다 정당 통폐합이 더 빈번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 통폐합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원내·외 당직을 맡는 의원들이 수시로 교체되고, 이로 인해 재공천 결정 과정에서 정당지도부 역임 경험이 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는 의원의 선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7대 총선에서만 새천년민주당 의원의 선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약 4.7배 증가한다. 이는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둘로 쪼개지면서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에 기반을 가진 중진 의원들이 당에 잔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새누리당(한나라당)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지도부가 공천 심사과정에서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수를 거의 반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은 17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각각 약 31.2배(18대 총선), 약 18.6배(19대 총선), 약 3.5배(20대 총선)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의원의 성별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지금까지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직의원의 이념(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새누리당(한나라당)의 경우, 17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현직의원의 이념이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설1의 예측과는 달리,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당의 이념 평균에

서 먼 의원을 오히려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8대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당의 이념 평균에 가까운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18대와 20대 총선 당시 야당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 지향에 맞서 이념적인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은 당이 지향하는 이념에 동조하는 의원을 재공천하여 당내 응집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두 정당들에서 현직의원의 이념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총선이 치러질 당시에 정당들의 내부 상황 즉, 정당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공천 심사 기준 등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두 정당들 간에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가 재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을 제외한 총선들에서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은 여/야당 여부와 상관없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정당들이 대정부질문을 지지층 결집과 정책 선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을 재공천함으로써, 정당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 횟수가 일부 총선에서 재공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법안표결 자료 분석을 통해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척도로서 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를 측정하여 일부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들도 있다. 먼저, 현직의원의 지역구 활동, 당내 계파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 의원은 임기 동안 어떻게 지역구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어떤 계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재공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직의원의 지역구 활동이나 당내 계파는 현실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정당지도부의 신뢰 여부가 대정부질문자 선정과 재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당지도부의 신뢰 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대정부질문자 선정과 재공천 여부가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정당지도부의 신뢰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그리고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는 것은 정당지도부의 선택을 받아 정당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은 정당지도부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당지도부는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횟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과 17대 총선 이전의 역대 총선들에 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분석의 시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총선 시기에 따라 정당별로 대정부질문 횟수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종단적으로(longitudinal) 더 길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직의원의 대정부질문 태도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거나, 야당 의원임에도 동료의원들에 비해 정부·여당의 정책에 덜 비판적일 때, 재공천 가능성이 낮아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에 W-NOMINATE나 정당단합표결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회 홈페이지. 2020. <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검색일: 2020.05.06).
- 국회사무처. 2011. 『제16대 국회사』. 서울: 국회사무처.
- _____. 2012. 『제17대 국회사』. 서울: 국회사무처.
- _____. 2014. 『제18대 국회사』. 서울: 국회사무처.
- _____. 2018. 『제19대 국회사』. 서울: 국회사무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2020. <http://www.peoplepowerparty.kr/intro.jsp>(검색일: 2020.08.06).
- 길정아. 2011.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한국정치연구』 20집 1호, 291-316.
- 김기동·차보경·이재목. 2018. “입법성과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연구』 24권 2호, 102-134.
- 김민전. 2008.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 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4권 2호, 31-59.
- 김병준. 1989.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23권, 3-19.
- 김영진. 2016. “비례대표 초선의원의 지역구 공천 결정 요인 분석: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천결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3권 2호, 122-123.
- 네이버 인물검색. 2020. <https://people.search.naver.com/>(검색일: 2020.08.20).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2020. <http://theminjoo.kr/main.do>(검색일: 2020.08.06).
- 문우진. 2011.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의정연구』 17권 2호, 5-40.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41-57.
- 박명호·김민선. 2008.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자의 재선 추이에 관한 분석: 16-18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161-175.

- 박상운. 2012. “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5권 2호, 101-120.
- _____. 2020. “제21대 총선 공천과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경기. 10월.
- _____. 이호준. 2015. “현직자 우위의 구성요소.” 『사회과학연구』 31집 1호, 393-410.
- 박찬욱. 1995. “한국 의회정치 특성.” 『의정연구』 1권 1호, 14-38.
- 소호영. 2015. “국회의원 재공천 요인 분석: 18,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용화. 2015. “한국정당 1인 지배하의 권력적 공천성격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6권 4호, 659-681.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145-164.
- _____. 2012.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권 2호, 5-37.
- 이내영 · 문우진 · 신재혁. 2013. “16~18대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_____. 이호준. 2015.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의정논총』 10권 2호, 25-54.
- 이호준. 2016. “19대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 고려대학교.
- 장덕진 · 김란우 · 박기웅. 2012. “17대 국회 법안 표결의 정치경제학: 146개 쟁점법안에 대한 NOMINATE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집 1호, 1-23.
- 전진영. 2010. “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119-1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info.nec.go.kr/main> (검색일: 2020.09.10).
- 최혜령. 2013. “국회의원의 공천과 재선: 18대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도와 선거 경쟁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집 3호, 73-97.
- Bailer, Stefanie. 2011. “People’s Voice or Information Pool? The Role of, and Reasons for, Parliamentary Questions in the Swiss Parliament.”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7(3): 302-314.
- Baumann, Markus, Debus, Marc, and Klingelhöfer, Tristan. 2017. “Keeping One’s Seat: The Competitiveness of MP Renomination in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Journal of Politics* 79(3): 979-994.
- Carey, John M. 2009. *Legislative Voting and Accountabi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son, Jamie L. Engstrom, Erik J. and Roberts, Jason M. 2007. “Candidate Quality, the Personal Vote,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Congres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289-301.
- Cox, Gary W. and McCubins, Mathew D. 1993.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and Katz, Jonathan N.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478-497.
- Dalton, Russell J. 2014.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6th ed)*. Los Angeles: SAGE, CQ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ntman, Robert M. 1983. “The Impact of Ideology on Legislative Behavior and Public Policy in the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45(1): 163-182.
- Frantzich, S. 1979. “Who Makes Our Law? The Legislative Effectiveness of Member of the U. S. Congr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3): 409-428.
- Golden, Miriam A. and Picci, Lucio. 2015. “Incumbency Effects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eaders and Backbenchers in the Postwar Italian Chamber of Deputi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0(4): 509-538.
- Hall, Richard L. and Wayman, Frank W. 1990. “Buying Time: Moneyed Interests and the Mobilization of Bias in Congressional Committees.” *American Political*

- Science Review* 84(3): 797-820.
- Hogan, Robert E. 2003. "Sources of Competition in State Legislative Primary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8(1): 103-126.
- Jun, Hae-Won and Hix. 2010. "Electoral Systems, Political Career Paths and Legislative Behavior: Evidence from South Korea's Mixed-Member System."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153-171.
- Klein, Elad. 2016. "Electoral Rules and Party Switching: How Legislators Prioritize Their Goal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1(3): 715-738.
- Krasno, Jonathan S. and Green, Donald Philip. 1988. "Preempting Quality Challengers in House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50(4): 920-936.
- Levitt, Steven D. and Wolfram, Catherine D. 1997. "Decomposing the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 S. Hous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2(1): 45-60.
- Marino, Bruno, and Diodati, Nicola Martocchia. 2017. "Masters of Their Fate? Explaining MPs' Re-Candidacy in the Long Run: The Case of Italy (1987-2013)." *Electoral Studies* 48: 1-9.
- Mayhew, David R.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Morgenstern, Scott. 2004. *Patterns of Legislative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ole, Keith T. 2005. *Spatial Models of Parliamentary Vot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Lewis, Jeffrey, B., Lo, James and Carroll, Royce. 2011. "Scaling Roll Call Votes with wnominat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2(14): 1-21.
- Powell, Lynda W. 2013. "The Influence of Campaign Contributions on Legislative Policy." *The Forum: A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Contemporary Politics* 11(3): 339-355.
- Rasch, Bjørn Erik. 2011. "Behavioural Consequences of Restrictions on Plenary

- Access-Parliamentary Questions in the Norwegian Storting.”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7(3): 382-393.
- Rozenberg, Olivier and Martin, Shane. 2011. “Questioning Parliamentary Questions.”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7(3): 394-404.
- Salmond, Rob. 2014. “Parliamentary Question Times: How Legislative Accountability Mechanisms Affect Mass Political Engagement.”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0(3): 321-341.
- Schroedel, Jean Reith. 1986. “Campaign Contributions and Legislative Outcome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9(3): 371-389.
- Snyder, James M. and Michael M. Ting. 2011. “Electoral Selection with Parties and Prima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4): 782-796.
- Stratmann, Thomas. 1991. “What Do Campaign Contributions Buy? Deciphering Causal Effects of Money and Votes.” *Southern Economic Journal* 57(3): 606-620.
- Yildirim, Tevfik Murat, Kocapınar, Gülnur and Yüksel Alper Ecevit. 2019. “Staying Active and Focused? The Effect of Parliamentary Performance on Candidate Renomination and Promotion.” *Party Politics* 25(6): 794-804.

투고일: 2020.10.15.	심사일: 2020.12.08.	게재확정일: 2020.12.12.
------------------	------------------	--------------------

Incumbent's ideology, parliamentary question and renomination in the 17th ~ 20th general election

Park, Sang-Un | Korea University

Why do not some incumbents be renominated? The previous study tested the effect of party loyalty on incumbent renomination in one general election and has measured party unity voting as an index of party loyalty. But we hav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f it in the past elections and utilize incumbent's parliamentary question as a new index of i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cumbent's ideology and parliamentary question on their renomination in the 17th ~ 20th general elections. Contrary to my expectations, when the incumbent's ideology of The Saenuri Party(Grand National Party) is far from party affiliation, they have a high probability of renomination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The Democratic Party(Unified Democratic Party), when it makes no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incumbents and party affiliation, they have a high probability of renomination in the 18th and 20th general elections. Moreover, in The Saenuri Party(Grand National Party), parliamentary question has no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renomination in four gener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Democratic Party(Millennium Democratic Party or Democratic United Party), the incumbents who were selected as parliamentary questioners have a high probability of renomination regardless of taking power. The implication is that the incumbent's ideology and parliamentary question have an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renomination in some general elections.

Key Words | Renomination, Parliamentary Question, General Election, Party Loyalty

부록

〈표 5〉 사망, 의원직 상실, 불출마 선언 및 총선 공천 심사 이전, 소속 정당 탈당 의원 명단

번호	구분	성명	사유(년-월-일)
1	16대 국회	곽치영	당선무효(2002-11-26)
2	16대 국회	장성민	당선무효(2002-1-22)
3	16대 국회	김호일	당선무효(2002-2-21)
4	16대 국회	유성근	당선무효(2002-5-24)
5	16대 국회	박용호	당선무효(2002-6-14)
6	16대 국회	정인봉	당선무효(2002-6-25)
7	16대 국회	장정언	당선무효(2002-6-28)
8	16대 국회	정재문	당선무효(2002-6-28)
9	16대 국회	김윤식	당선무효(2003-12-26)
10	16대 국회	김영배	당선무효(2003-3-28)
11	16대 국회	김종호	불출마 선언 및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4-3-23)
12	16대 국회	천용택	불출마 선언 및 사직(2004-5-14)
13	16대 국회	서영훈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0-12-28)
14	16대 국회	박양수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0-27)
15	16대 국회	오영식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0-27)
16	16대 국회	이미경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0-27)
17	16대 국회	이재정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0-27)
18	16대 국회	허운나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0-27)
19	16대 국회	김홍신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2-10)
20	16대 국회	조배숙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3-12-15)
21	16대 국회	박인상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4-3-30)
22	16대 국회	심규섭	사망(2002-1-27)
23	16대 국회	손태인	사망(2002-1-5)
24	16대 국회	김태호	사망(2002-7-10)

25	16대 국회	황승민	사망(2003-2-6)
26	16대 국회	김한길	사직(2000-10-9)
27	16대 국회	한명숙	사직(2001-2-5)
28	16대 국회	유삼남	사직(2001-9-7)
29	16대 국회	이회창	사직(2002-12-11)
30	16대 국회	강현욱	사직(2002-7-1)
31	16대 국회	박광태	사직(2002-7-1)
32	16대 국회	손학규	사직(2002-7-1)
33	16대 국회	김민석	사직(2002-7-8)
34	16대 국회	김영진	사직(2003-3-4)
35	16대 국회	김화중	사직(2003-3-4)
36	16대 국회	문희상	사직(2003-3-7)
37	16대 국회	김영구	선거무효(2001-6-1)
38	16대 국회	장영신	선거무효(2001-7-13)
39	16대 국회	이만섭	정계은퇴 선언(2004-3-21)
40	16대 국회	원철희	형 확정(2003-4-8)
41	17대 국회	이상락	당선무효(2004-12-10)
42	17대 국회	오시덕	당선무효(2005-1-27)
43	17대 국회	이덕모	당선무효(2005-2-18)
44	17대 국회	복기왕	당선무효(2005-3-10)
45	17대 국회	김맹곤	당선무효(2005-3-25)
46	17대 국회	이철우	당선무효(2005-3-25)
47	17대 국회	김기석	당선무효(2005-8-19)
48	17대 국회	박창달	당선무효(2005-9-15)
49	17대 국회	조승수	당선무효(2005-9-29)
50	17대 국회	박혁규	당선무효(2005-9-9)
51	17대 국회	김정부	당선무효(2006-5-12)
52	17대 국회	단병호	불출마 선언 및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8-3-1)

53	17대 국회	김영춘	불출마 선언(2007-10-11)
54	17대 국회	안영근	불출마 선언(2008-1-29)
55	17대 국회	이해찬	불출마 선언(2008-1-29)
56	17대 국회	김용갑	불출마 선언(2008-1-3)
57	17대 국회	박세일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5-3-25)
58	17대 국회	김혁규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7-10-12)
59	17대 국회	박재완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8-3-1)
60	17대 국회	이주호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08-3-1)
61	17대 국회	구논희	사망(2006-11-5)
62	17대 국회	박홍수	사직(2005-1-10)
63	17대 국회	김문수	사직(2006-4-24)
64	17대 국회	정덕구	사직(2007-2-1)
65	17대 국회	최연희	탈당으로 무소속(2006-2-27)
66	17대 국회	임종인	탈당으로 무소속(2007-1-22)
67	17대 국회	유시민	탈당으로 무소속(2008-1-16)
68	17대 국회	김선미	탈당으로 무소속(2008-2-4)
69	17대 국회	안병엽	형 확정(2006-11-10)
70	17대 국회	한화갑	형 확정(2006-12-22)
71	17대 국회	신계륜	형 확정(2006-2-10)
72	17대 국회	이정일	형 확정(2006-8-24)
73	17대 국회	이호웅	형 확정(2006-9-14)
74	17대 국회	김홍일	형 확정(2006-9-28)
75	17대 국회	김병호	형 확정(2007-12-13)
76	18대 국회	이무영	당선무효(2008-12-11)
77	18대 국회	이한정	당선무효(2008-12-11)
78	18대 국회	김세웅	당선무효(2008-12-24)
79	18대 국회	김일윤	당선무효(2008-12-24)
80	18대 국회	문국현	당선무효(2009-10-22)

81	18대 국회	구본철	당선무효(2009-1-15)
82	18대 국회	윤두환	당선무효(2009-3-12)
83	18대 국회	김노식	당선무효(2009-5-14)
84	18대 국회	서청원	당선무효(2009-5-14)
85	18대 국회	양정례	당선무효(2009-5-14)
86	18대 국회	허범도	당선무효(2009-6-23)
87	18대 국회	최옥철	당선무효(2009-7-23)
88	18대 국회	홍장표	당선무효(2009-7-23)
89	18대 국회	정국교	당선무효(2009-7-9)
90	18대 국회	박종희	당선무효(2009-9-10)
91	18대 국회	임두성	당선무효(2010-9-9)
92	18대 국회	박희태	불출마 선언(2012-1-7)
93	18대 국회	정진석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10-7-16)
94	18대 국회	김금래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11-9-29)
95	18대 국회	유원일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12-1-25)
96	18대 국회	이용삼	사망(2010-1-20)
97	18대 국회	선경식	사망(2012-4-27)
98	18대 국회	이달곤	사직(2009-3-2)
99	18대 국회	임태희	사직(2010-10-1)
100	18대 국회	강운태	사직(2010-5-13)
101	18대 국회	박상돈	사직(2010-5-13)
102	18대 국회	송영길	사직(2010-5-13)
103	18대 국회	이계진	사직(2010-5-13)
104	18대 국회	이광재	사직(2010-5-13)
105	18대 국회	이시중	사직(2010-5-13)
106	18대 국회	나경원	사직(2011-10-6)
107	18대 국회	최문순	사직(2011-3-31)
108	18대 국회	김효재	사직(2011-8-4)

109	18대 국회	강용석	탈당으로 무소속(2010-9-2)
110	18대 국회	최구식	탈당으로 무소속(2012-1-2)
111	18대 국회	김종률	형 확정(2009-9-24)
112	18대 국회	최철국	형 확정(2010-12-9)
113	18대 국회	서갑원	형 확정(2011-1-27)
114	18대 국회	현경병	형 확정(2011-6-10)
115	18대 국회	공성진	형 확정(2011-6-9)
116	19대 국회	김영주	당선무효(2013-12-12)
117	19대 국회	이재균	당선무효(2013-2-14)
118	19대 국회	김근태	당선무효(2013-2-28)
119	19대 국회	김형태	당선무효(2013-7-25)
120	19대 국회	신장용	당선무효(2014-1-16)
121	19대 국회	이재영 (李在暎)	당선무효(2014-1-16)
122	19대 국회	현영희	당선무효(2014-1-16)
123	19대 국회	배기운	당선무효(2014-6-12)
124	19대 국회	성완중	당선무효(2014-6-26)
125	19대 국회	안덕수	당선무효(2015-3-12)
126	19대 국회	최재천	불출마 선언 및 탈당으로 무소속(2015-12-28)
127	19대 국회	박기춘	불출마 선언 및 탈당으로 무소속(2015-8-11)
128	19대 국회	신학용	불출마 선언(2015-12-10)
129	19대 국회	안종범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14-6-12)
130	19대 국회	김현숙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15-8-4)
131	19대 국회	강은희	비례대표, 탈당으로 인한 퇴직(2016-1-18)
132	19대 국회	고희선	사망(2013-8-25)
133	19대 국회	박근혜	사직(2012-12-10)
134	19대 국회	윤금순	사직(2012-7-9)
135	19대 국회	김기현	사직(2014-5-15)

136	19대 국회	김진표	사직(2014-5-15)
137	19대 국회	남경필	사직(2014-5-15)
138	19대 국회	박성효	사직(2014-5-15)
139	19대 국회	서병수	사직(2014-5-15)
140	19대 국회	유정복	사직(2014-5-15)
141	19대 국회	윤진식	사직(2014-5-15)
142	19대 국회	이낙연	사직(2014-5-15)
143	19대 국회	이용섭	사직(2014-5-15)
144	19대 국회	정몽준	사직(2014-5-15)
145	19대 국회	심학봉	사직(2015-10-12)
146	19대 국회	유승우	제명으로 무소속(2014-6-18) 및 불출마 선언(2016-2-3)
147	19대 국회	김미희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2014-12-19)
148	19대 국회	김재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2014-12-19)
149	19대 국회	오병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2014-12-19)
150	19대 국회	이상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2014-12-19)
151	19대 국회	이석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2014-12-19)
152	19대 국회	노회찬	형 확정(2013-2-14)
153	19대 국회	김선동	형 확정(2014-6-12)
154	19대 국회	김재윤	형 확정(2015-11-12)
155	19대 국회	송광호	형 확정(2015-11-12)
156	19대 국회	조현룡	형 확정(2015-11-27)
157	19대 국회	박상은	형 확정(2015-12-24)
158	19대 국회	한명숙	형 확정(2015-8-20)

주: 위의 명단은 16~19대 국회의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국회사무처 2011; 2012; 2014; 2018).

〈표 6〉 총선 공천 심사 이전, 당적 변경 의원 명단

번호	구분	성명	비고	
			이전 소속 정당	당적 변경
1	16대 국회	강봉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	16대 국회	강성구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3	16대 국회	강창희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4	16대 국회	김근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	16대 국회	김덕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6	16대 국회	김덕배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7	16대 국회	김명섭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8	16대 국회	김부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9	16대 국회	김성호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10	16대 국회	김영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11	16대 국회	김용환	희망의 한국신당	한나라당
12	16대 국회	김원기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13	16대 국회	김원길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14	16대 국회	김원웅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15	16대 국회	김태홍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16	16대 국회	김택기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17	16대 국회	김희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18	16대 국회	남궁석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19	16대 국회	문석호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0	16대 국회	박병석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1	16대 국회	박상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22	16대 국회	배기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3	16대 국회	설송웅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4	16대 국회	송광호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25	16대 국회	송석찬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6	16대 국회	송영길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7	16대 국회	송영진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8	16대 국회	신계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9	16대 국회	신기남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30	16대 국회	안영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31	16대 국회	원유철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32	16대 국회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33	16대 국회	유재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34	16대 국회	이강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35	16대 국회	이근진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36	16대 국회	이부영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37	16대 국회	이상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38	16대 국회	이양희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39	16대 국회	이완구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40	16대 국회	이우재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41	16대 국회	이원성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42	16대 국회	이인제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43	16대 국회	이재선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44	16대 국회	이종걸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45	16대 국회	이창복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46	16대 국회	이혜찬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47	16대 국회	이호웅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48	16대 국회	임종석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49	16대 국회	임채정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0	16대 국회	장영달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1	16대 국회	전용학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52	16대 국회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3	16대 국회	정동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4	16대 국회	정동채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5	16대 국회	정세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6	16대 국회	정장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7	16대 국회	조성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8	16대 국회	천정배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59	16대 국회	최용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60	16대 국회	한승수	민주국민당	한나라당
61	16대 국회	함석재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62	16대 국회	홍재형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63	17대 국회	강길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64	17대 국회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65	17대 국회	노회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66	17대 국회	박상돈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67	17대 국회	신국환	국민중심당	통합민주당
68	17대 국회	심상정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69	17대 국회	이상민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70	17대 국회	이용희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71	17대 국회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72	17대 국회	정몽준	국민통합21	한나라당
73	17대 국회	정진석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74	19대 국회	강동원	통합진보당	더불어민주당
75	19대 국회	권은희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76	19대 국회	김관영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77	19대 국회	김동철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78	19대 국회	김영환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79	19대 국회	김한길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0	19대 국회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1	19대 국회	박주선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2	19대 국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3	19대 국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84	19대 국회	유성엽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5	19대 국회	장병완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6	19대 국회	조경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87	19대 국회	주승용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88	19대 국회	천정배	무소속	국민의당
89	19대 국회	최원식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90	19대 국회	황주홍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주: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나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해 당선된 이후, 복당한 경우에는 당적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18대 총선에서 의원이 무소속이나 친박연대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복당한 경우에는 위의 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의 명단은 16~19대 국회의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국회사무처 2011; 2012; 2014; 2018).